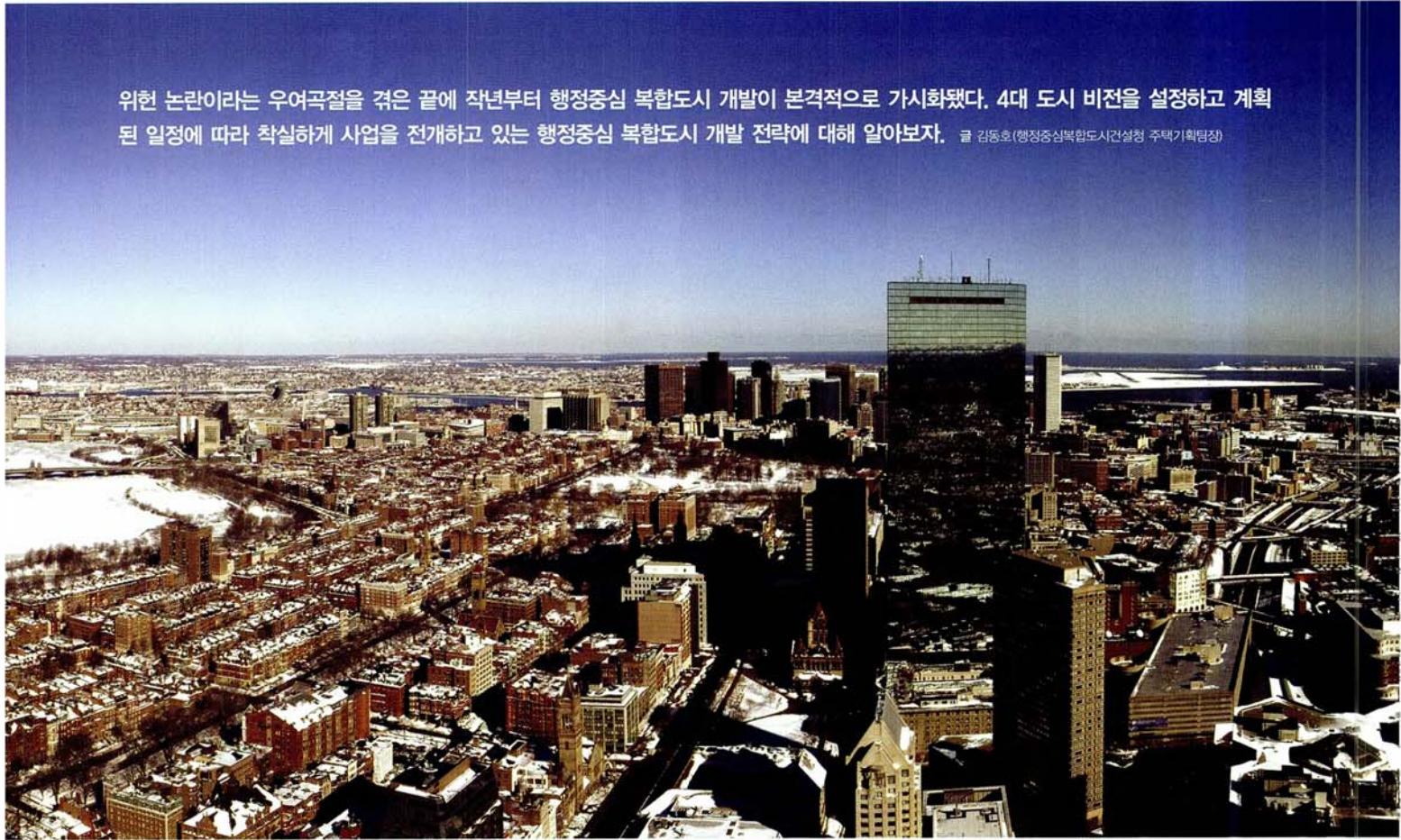


위헌 논란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작년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4대 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동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기획팀장)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을 말하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권의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이른바 삼분(三分)정책(분권, 분산, 분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삼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수도권 기능의 일부 이전이라는 이른바 분도(分都)의 성격을 가졌다면, 혁신도시 건설은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관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과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2005년 11월 발표한 도시 개념에 관한 국제 공모 결과를 토대로 도시 기본 구상을 마련(06.1)하고 도시건설의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을 수립(06.7)하는 한편, 부문별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개발계획을 마련(06.11)해 2007년 7월부터 1단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모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 연구 과제를 통해 기본계획 12개 전략 과제 및 도시 경관 7대 전략 등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전략 참여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신도시 개발정책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균형 발전은 기본적으로 공간적 형평성(Equity) 추구를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도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내버릴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과제임은 자명하다.

대도시가 가진 집적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국가 경쟁력 향상이 불가능하며, 국토정책 역시 분산된 집중(Decentralized Concentration) 형태의 개발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개발에 있어서 소지역별로 나눠 먹기식의 사업 추진은 막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에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도시의 경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가 장기적으로 인간이 살 만한 도시개발과 적절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혁신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의 창의력을 활용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다. 정치·행정적 분권과 사회·문화적 분권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권형 행정구조를 감안해 3대 전략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로 성장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대전·충청권은 물론, 다른 지역의 경우도 현재의 수도권이나 대전·충청권에 대한 대응축(Counter-magnet)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광역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도시계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입지와 건설 규모 등을 결정할 때 광역 지역 내에서의 안정적인 도시계층구조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필두로 주변 지역에 관련 민간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가 수반되어야 원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업도시의 경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자본력을 활용한 신도시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혁신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향후 신도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기존 도시와

의 조화다. 우리는 과거의 신도시 개발 사례로부터 기존 도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여전히 도시 내에서 외로운 섬으로 존재하는 신도시를 종종 볼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와 네이더 테라니(Nader Tehrani)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행정도시 국제 공모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에서 “정부 부처는 행정도시에서 연구 기능이나 문화 산업 같은 기능을 끌어들이는 ‘유인책(Decoy)’으로 의도해야 하고, 정부 부처가 다른 기능이나 활동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기초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했다. 이러한 지적은 비단 행정도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원하는 신도시 개발 정책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 주체들이 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